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과제책임자 김은경 연구위원

##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 초록

- ◆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인 여성추천보조금과 여성정치발전비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나, 제도 시행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 본 연구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두 조항의 내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운영상의 현실적인 난항으로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함.
- ◆ 이에 본 연구는 제도개선 및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개선안을 제안함. 의회 의원에게만 적용하던 여성추천보조금을 단체장 후보로 확대하거나, 후보추천보조금에 덧붙여 당선보조금을 고려하는 방안임. 여성 정치발전비의 경우에도 해당 비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과 정당이 지급받는 모든 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 배경 및 문제점

- 정치자금법 내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된 제도로, 전체 선거구의 일정 비율의 여성후보를 공천했을 때 그 비율에 따라 정당을 통해 여성후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여성정치발전비는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해진 비용으로 2004년에 신설되었음.
- 그러나 제도 시행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권수현 외, 2017). 논쟁은 주로 여성정치발전비를 둘러싼 논쟁이었는데, 여성정치발전비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논쟁의 핵심임.
- 여성 정치인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정당의 당직자 인건비나 조직운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자금법의 사용 용도가 불명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변명이 현재 이 조항을 둘러싼 이슈임.

- 여성추천보조금의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과 같이 국회의석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원외정당이나 소수정당에서는 여성후보를 추천하고도 거대 정당보다 적은 액수의 보조금을 받게 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여성정치발전비의 경우는 여성의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조항에 구체적인 용도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 정당이라는 헌법기구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당은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하며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육성의 역할을 통해 성평등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여성 정치인의 수는 많지만 정작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의 수가 적은 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처한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정당은 평소에 정당 내부의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소홀하고, 외부에서 인지도 있는 정치인을 영입하는 식으로 여성후보 공천을 시행해 옴. 여성정치발전비가 신설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정당은 여성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상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선거 시기에 정당 출신 여성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은 이 같은 관행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 선거공영제 및 정치자금법의 기본 개념

- ▶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로,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됨(이정환, 2016: 1).
-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내역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정을 방지”(제1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기본원칙은 정치자금법에 따름.
- ▶ 국고보조금은 정당 활동 보호와 정책 중심의 정당 확립,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 당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이상목, 2009: 127; 정연정, 2021: 47-48).
- ▶ 한편 여전히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장치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음(정연정, 2021: 57-58; 김대근 외, 2015: 50, 조소영, 2015: 19-20).

### ● 정치참여의 성불평등과 정치자금 조달에서의 성차

- ▶ 정치영역은 기존에 남성이 중심이자 여성은 주변적인 존재로 여겨져 오던 대표적인 분야이며,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 과소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충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임(조현옥·김은희, 2010: 110).

- ▶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의 원인 중에서도 ‘자금’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힘(OSCE·ODIHR, 2014: 76; 김원홍 외, 2013; 문미경 외, 2018: 95-96; 권수현, 2019: 98).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재산이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김정도·김진하·정준표, 2013; 김대식·조진만·윤지성, 2020: 116-117에서 재인용),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재산 동원이나 정치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이진옥 외, 2020: 213).
- ▶ 선거비용과 득표율 간의 정(+)의 관계를 밝힌 전용주·남승오(2020)의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 정치영역에서 자금 동원에 관한 성차는 곧 정치 참여에 대한 성차로 이어질 수 있음.

## ● 여성 정치인 대상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실제

### ● 국내 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와 규모

- ▶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에 여성추천보조금 관련 조항(제26조)과 여성정치발전비 관련 조항(제28조제2항)을 두어 여성 대상 국고보조금의 법제 제도를 갖추고 있음. 정치자금법에서 첫 번째 유형으로 여성추천보조금, 세 번째 유형으로 여성정치발전비를 규정하고 있음.
- ▶ 전체 정당의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한국은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아프리카의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유럽 국가들보다 낮으며 보조금과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Soh, 2011: 102; Ohman, 2018: 63에서 재인용).
- ▶ 본 연구를 위해 입수한 3개 정당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정당의 전체 수입 중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선거가 있는 해에 따라서는 50%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경상보조금의 비율은 거대 정당의 경우에는 20%에서 40%를 넘기는 만큼,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결코 작지 않음. 경상보조금의 10%인 여성정치발전비 현황은, 2021년도 기준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약 21억원, 국민의힘이 약 18억원, 정의당은 3억원 규모임.

### ● 여성정치발전비 실행에서의 문제점

- ▶ 여성정치발전비는 ‘선거비용외’로 지출되는 정치자금으로서, 정책의 추진·지지·반대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정치활동비’의 일환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중앙선관위, 2020a: 18-19).
- ▶ 김은경 외(2019)의 연구에서 2018년 5개 주요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당들은 여성정치발전비를 당직자 인건비에 가장 큰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한편 교육비나 정책개발비, 조직운영비 등에 대한 지출은 거의 없거나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은경 외, 2019: 77).
- ▶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여성정치발전비 운용 실태에 대한 권수현·윤채영·조혜민(2017)의 연구에 따르면, 정당들은 선거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발전비의 일부를 선거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음.

## 주요 정당의 여성 정치인 육성 제도 운영 현황

### ● 정당의 여성 정치인 육성 제도·기구 및 운영 프로그램

#### ● 여성정치인 육성 제도·기구

- ▶ 주요 정당들은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제도와 기구 등에 관하여 당헌 및 당규에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책연구소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고 있음.
- ▶ 국민의 힘은 당헌에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과 정책연구소 내에 여성정책센터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2022년 3월 여성국은 청년국, 직능국과 함께 ‘미래국’으로 통합되었음.
- ▶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내용을 당헌으로 규정하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또한 당규에 여성리더십센터 설치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당 내 관련 여성국, 전국여성위원회 등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 정의당은 당헌 및 당규 내에 여성 정치인의 대표직 수행과 선거, 정치 참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당 내 여성위원회 및 젠더인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권리신장 및 정치참여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정당별 여성정치인 육성 및 여성정치인 관련 프로그램

- ▶ 국민의힘은 ‘여성정치아카데미’, ‘굿 소사이어티 리더 교육’ 등 정당 차원의 여성 대상 정치교육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 리더십 함양 및 여성 정치인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 ▶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방선거 여성 출마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계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정치아카데미’ 및 ‘더불어 여성 연설회’ 등을 통하여 정치지식 및 여성리더십 함양을 지원하고 있음.
- ▶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치학교’를 통해 여성 대상 정치, 페미니즘, 가족구성권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성정치 리더교육’, ‘여성정치 리더십아카데미’ 등을 통해 여성 당원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

## 여성정치발전비 사용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 ● 여성정치발전비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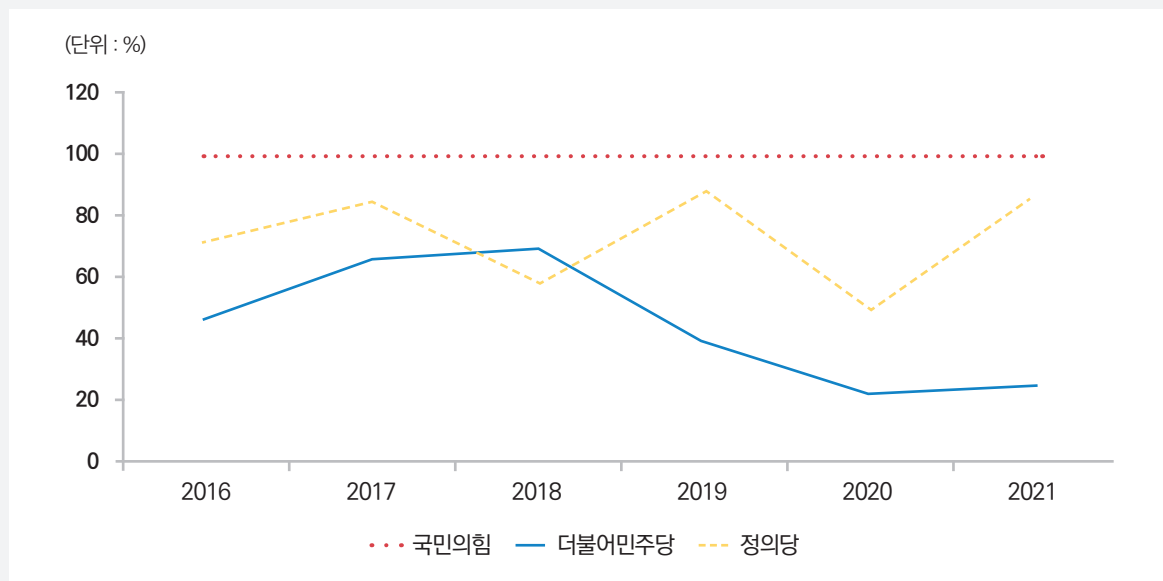
- ▶ 회계감사보고서 내역을 토대로 여성정치발전비를 인건비, 교육비, 여성후보·선거지원비, 정책개발비, 조직 운영비의 5개의 대분류로 구성하고, 각각에 대해 중분류 기준을 설정함.
- ▶ 여성정치발전비에서 의미하는 인건비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여성 당직자 인건비를 의미함. 당직자 인건비는 경상보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는 여성 당직자의 인건비를 여성정치발전비에서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 따라서 인건비 항목을 여성정치발전비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지출비중이 크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음.

- ▶ 교육비는 내용 측면에 맞춰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당원 성평등 의식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중분류 기준을 둬. 여성후보·선거지원비는 기재된 내역 상 명백하게 그 명목이 여성후보 및 선거지원으로 드러난 사항만을 포함함. 정책개발비는 정책·선거공약 수립과 이슈 제기, 현안 해결 등을 논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며, ‘정책 및 공약수립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와 ‘조사 및 연구용역’의 중분류로 구성함. 조직운영비는 여성국, 여성위원회, 여성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 등 각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과 해당 조직의 시설·물품 구입비, 출장비 등을 포함함. 여성간담회, 공부모임, 학습동아리, 도서구입비, 그리고 당내 성비위 사건을 다루는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운영, 외부 단체와의 교류 및 후원을 위한 분담금을 포함함.

## ● 여성정치발전비 항목별 지출 추이(2016년~2021년)

- ▶ 인건비의 경우 국민의힘의 지출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2018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임. 정의당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던 해에는 인건비가 하락하고 그 외의 해에 다시 상승 양상을 보임. 여성정치발전비에서 당직자 인건비 지급은 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지만, 근본적인 여성정치발전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전면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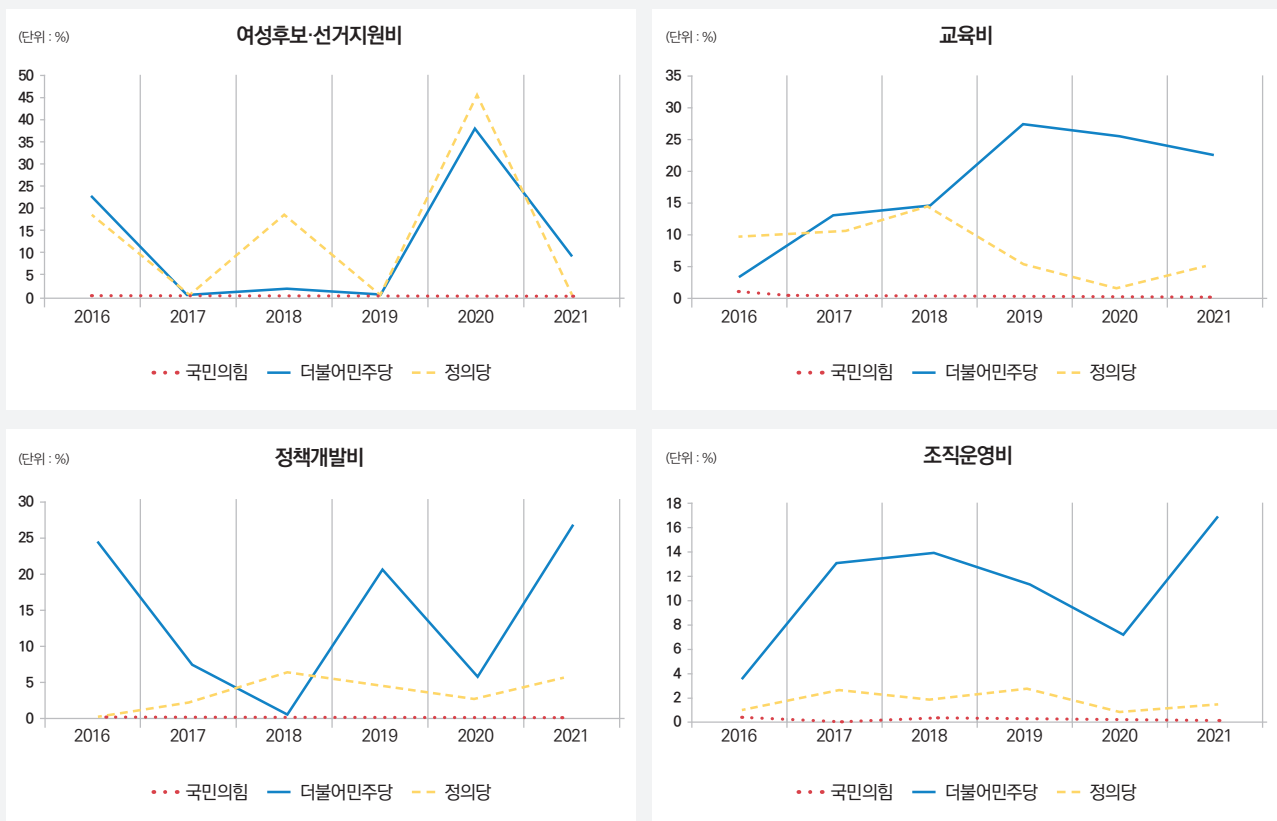
<그림 1> 정당별 인건비 지출 추이



- ▶ 교육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이후로 지출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힘은 세 정당 중에서 제일 낮은 지출률을 나타냈고 2017년과 2020년에는 지출이 없었음. 정의당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상승세이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함.
- ▶ 여성후보·선거지원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제21대 총선 당시 지출률이 증가했음. 국민의힘은 2016년 0.1%에 미치지 않는 수준의 지출 이후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이 없었음. 정의당은 제20대 총선과 제7회 지방선거에서 18%대의 지출률을 나타냈고, 제21대 총선에서는 46%에 달하는 수준의 지출률을 보임.

- ▶ 정책개발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24.36%에서 2018년 0.61%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이후 20%대를 유지함. 국민의힘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0.05%~0.25% 사이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지출이 없음. 정의당은 2016년 0.17%에서 2018년 6.33%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이후 2020년까지 하락하다가 2021년에 5.96%로 상승함.
- ▶ 회계보고서 지출 항목에 별도로 인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여성정치발전비에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경우 거의 모든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정치발전비의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됨.
- ▶ 정당은 선거보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음에도 ‘선거비용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여성정치발전비 과목에서 여성후보·선거지원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용처는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음. 따라서 투명한 자금 집행을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두 정당보다 조직운영비의 지출률이 항상 높게 나타남. 조직운영에 따른 경비소요는 필연적이나, 이로 인해 여성 교육이나 정책개발 관련 지출이 영향받지 않도록 적절하고 균형 잡힌 자금 집행이 요구됨.

<그림 2> 정당별 여성정치발전비 지출 추이





##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한 인식 및 수혜 경험

- ▶ 여성추천보조금 제도가 도입되고 약 20년이 되었지만, 그간 정당이 지역구 여성후보를 더 많이 공천하도록 유인하려는 당초의 목적에 비해 기대효과가 미미하여 할당제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아니라 패널티를 주는 방식의 재정적 제약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 정당은 선거보조금과 별도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여성추천보조금에 대해서만 여성후보에게 지원을 하였고, 여성정치발전비로 10억원 규모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 공모사업 공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 정치인이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당과 시도당, 그리고 시도당 여성위원회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부재임. 중앙당은 공모사업 이외에 여성정치발전비의 전체 규모를 공개하고, 최근 사용내역을 여성정치인들과 공유해야 함.
- ▶ 여성정치발전비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분담이 되어야 함. 중앙당과 시도당 간에 의사소통에서 나아가, 시도당에 분담되는 비용 규모를 정하고 중앙당과 시도당 간에 여성정치발전비 운영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함.
- ▶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여성추천보조금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여성 후보자에 대한 선거교육에 회계와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 여성정치발전비는 여성 정치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되도록 해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여성정치발전비는 여성 정치인과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음. 중앙당과 지역의 여성 정치인들은 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

##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운영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 여성추천보조금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

#### ● 여성당선보조금제 도입

- ▶ 지역구 선출직 여성 후보자에 대해서 공천이 아닌 당선자 수에 비례하는 여성당선보조금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여성당선보조금제는 여성추천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유형 가운데 추가 지급하는 유형에 속함. 다만 현재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 수에 기준을 둔 것이었는데, 그 기준을 여성 당선인으로 바꾸는 방안임.
- ▶ 당선인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칠레, 크로아티아, 솔로몬제도에 해당하는데, 크로아티아는 기존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고, 칠레와 솔로몬제도는 당선된 여성의 수에 따라 어떤 정당이든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음. 사실 한국처럼 여성 후보자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에티오피아, 루마니아인데, 여성 정치인에 대한 보조금 가운데는 가장 구속력이 낮은 편임(Ohman, 2018: 21).
- ▶ 여성당선보조금을 도입할 경우 정당이 그동안 당선 가능성과 거리가 먼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공천해온 관행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여성추천보조금 대상을 단체장 선거로 확대

- ▶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목적의 여성추천보조금을 여성후보 공천이 저조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를 포함하여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함.
- ▶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그동안 여성계 조차 여성의 정치참여 이슈에서 관심이 비교적 적은 분야였음. 여성추천보조금을 단체장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제안은 기초단체장에 여성 후보 공천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힘을 얻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기존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함.

## ● 선거보조금 삭감제(financial sanction) 도입

- ▶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제도는 재정적 보상(financial reward) 차원의 지원금을 주는 형식임.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여성추천보조금의 지원 효용성이 낮고 일부 정당에서는 여성후보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요구됨.
-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책 중 가장 강력한 보조금 삭감이라는 재정적 제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에서 해당 비율을 삭감하는 방안임.
- ▶ 보조금을 삭감하는 사례는 알바니아, 부르키나파소, 프랑스, 온두라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이며, 이들 국가는 여성 후보를 최소 30% 이상 공천하지 않을 경우 20%의 정부 보조금을 삭감함(Ohman, 2018:25).

## ● 여성정치발전비 활성화 방안

### ● 여성정치발전비 운용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 ▶ 여성정치발전비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중앙당 유급사무처 당직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 이 전담인력은 기존 유급사무직원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 여성정치발전비의 용도 규정 및 상근인력 규정 신설

- ▶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용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여성정치발전비의 용도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제28조 2의 신설과, 보조금을 받는 비용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상근 유급사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정당법 제30조의 개정을 제안함.

### ● 항목별 상한선 규정

- ▶ 연구 결과 여성정치발전비의 지출 내역이 각 정당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 모든 정당이 여성정치발전비를 큰 규제 없이 쓰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여성정치발전비의 세부집행 항목을 신설하여 항과 목의 사용 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 지출항목별 상한선은 현재 운영비를 고려할 때, 인건비 40%, 정책개발비 25%, 교육비 25%, 선거지원비 5%, 조직운영비 5%의 상한선이 적절하다고 봄.



- ▶ 정치자금법 제28조(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한 개정 작업시, 항목간 상한선을 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정치발전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임.

### ●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서 공개

- ▶ 여성정치발전비는 정당의 경상운영비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경상운영비가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되는지 역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당에 지급되는 모든 국고보조금에 대해 투명한 회계보고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중장기 계획 수립

- ▶ 여성정치발전비는 현재 1년 단위로 선거와 같은 단기적 차원에서 집행 중이나, 향후에는 여성정치인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식개선, 교육 등과 같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음.
- ▶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원한다면 정당 차원에서도 다양하면서도 의미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정책제언 요약

구분	정책 개선 방안
여성추천보조금	1. 당선보조금제 도입: 여성당선인수에 비례하여 지급 2. 여성추천보조금 대상에 단체장 선거 확대 적용 3. 선거보조금 삭감제 도입
여성정치발전비	1. 여성정치발전비 운용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2. 여성정치발전비의 용도 규정 및 상근인력 규정 신설 3. 항목 간 상한선 규정 4.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서 공개 5. 중장기 계획 수립

## 참고자료

- 권수현·윤채영·조혜민(2017). “여성, 제도, 정당: 여성정치발전비 운용실태(2004-2015) 분석”, 여성학연구. 27(2), 7-41.
- 권수현(2019). “정치진입의 성별화된 장벽들: 20대 국회의원의 출마결정 요인과 성차”, 페미니즘연구. 19(1), 91-128.
- 김대근·권수진·윤지영·임석순(2015).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대식·조진만·윤지성(2020). “선거비용외 지출은 선거와 관련 없는 비용인가?: 2015년과 2016년 선거비용외 지출 실태 분석”, 연구방법논총. 5(3), 109-152.
-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0). “정당의 여성 당직자 확대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김혜영·김복태·권민정(2019). “여성 당직자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정당 내·외 네트워크 구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도·김진하·정준표(2013).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자금지출 결정요인: 제19대 총선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지출의 비교분석”, 의정연구. 19(2), 169-200.
- 문미경·김혜영·이현출·임미영(2018). 2022년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한 당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상목(2009). “정치자금법의 변화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 21세기정치학회보. 19(1), 115-141.
- 이정환(2016). “한국 선거공영제에 대한 연구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옥·권수현·서복경·장명선·최가영·윤채영·권오연(2020).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1), 1-317.
- 전용주·남승오(2020).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비용과 선거결과: 제이콥슨 효과(Jacobson Effect)의 한국적 적용”, 한국정당학회보. 19(1), 33-58.
- 정연정(2021). “정당 국고보조의 의미,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1(1), 35-67.
- 조소영(2015).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16(1), 3-26.
- 조현옥·김은희(2010). “한국 여성정치활동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동향과전망. 79, 110-1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a). “2020년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1-54.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ldx=1129&bcldx=150338>, 접속일: 2022.7.15.)
- \_\_\_\_\_(2021a). 『2020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https://www.nec.go.kr/cmm/dozen/view.do?cbldx=1129&bcldx=151337&fileNo=2>, 접속일: 2022.7.17.)
- Ohman, Magnus(2018). Gender-targeted Public Funding for Political Parties: A Comparative Analysis. Stockholm: International IDEA.
- OSCE-ODIHR(2014). Handbook on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al Parties.
- Soh, E.(2011). ‘Ten years’experience of gender quota system in Korean politics’. GEMC Journal, 4(2011), 98-104.

주관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부처 : 국회입법조사처, 정당